

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
조문별 개정이유서

2021. 5.

금 융 위 원 회

## - 목 차 -

1. 감독분담금 부과액 상한기준 조정 및 추가분담금 징수의  
법적 근거 명확화 ..... 1
2. 감독·발행분담금 환급기준 개편 ..... 4

# 1. 감독분담금 부과액 상한기준 조정 및 추가분담금 징수의 법적 근거 명확화 (안 제12조제1항 개정)

## 가. 개정 이유

○ (감독분담금 부과액 상한) 금융회사가 영업규모에 비해 과도한 감독분담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총자산 대비 0.15%로 감독분담금 상한을 규정

- 그러나, 현행 방식은 자기 자산이 아닌 고객자산을 주로 운용하는 자산운용사 등\*의 분담금 상한을 영업규모 대비 과소평가

\* 집합투자업자(집합투자재산) · 투자일임업자(일임재산) · 신탁업자(신탁재산) 등  
→ 투자일임 · 신탁을 겸영하는 증권사 등의 경우에도 동일한 효과 발생

○ (추가분담금 징수의 법적 근거) 금융위 고시인 분담금 징수규정\*을 통해 재무건전성 악화 · 금융사고 등으로 추가검사를 받은 금융회사에 대한 추가감독분담금 제도를 운영중

\*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규정 §3의2④ : 원장은 직전사업연도 중 재무 건전성 악화, 금융사고 등에 따른 추가적인 검사(부문검사에 한한다) 실시로 검사대상 기관의 금융영역별 투입 연인원수가 상위 0.1%(평균 +표준편차\*3.09)에 속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해당 검사대상 기관별 분담금 총액에 30%를 추가하여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.

- 추가감독분담금 부과는 실질적으로 행정제재 성격을 수반하는 침익적 처분임에도 법령상 구체적 부과근거가 부재

| 구분      | 금융위설치법  | 금융위설치법 시행령  |
|---------|---|---|
| 구체적 명시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금융회사의 감독분담금 납부의무(§47①)</li> </ul>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회사별 분담금 한도(§12①)</li> <li>■ 회사별 분담요율 결정시 고려요소 : 총부채, 영업수익 등(§12①)</li> <li>■ 금융영역별 분담금 규모 : 영역별 금감원 투입인력, 영업수익 등 (§12①)</li> </ul> |
| 하위규정 위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감독분담금 분담요율 및 한도(§47③)</li> <li>■ 그 밖에 분담금 납부에 필요한 사항(§47③)</li> <li>☞ 시행령에 위임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회사별 분담요율 및 금융영역별 분담금 산정 세부기준(§12②)</li> <li>☞ 분담금 징수규정에 위임</li> </ul>  |

## 나. 개정 내용

- 금융회사 분담료 상한을 ‘총자산의 0.15% 또는 운용하는 집합투자·일임·신탁재산 합계액의 0.03% 中 큰 금액’으로 변경
- 총자산과 집합투자재산의 기준치 비율(1:5)은 지배구조법 사례\* 준용

<※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소규모 금융투자회사의 기준(시행령 §6③)>

- ①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인면서,
- ② 해당 금융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·투자일임재산·신탁재산의 합계액이 20조원 미만 (⇒ 총자산과 집합투자재산의 기준치 비율이 1 : 4)

- 금융회사별 분담요율 결정시 고려요소로서 ‘재무건전성 악화 및 금융사고 등에 따른 추가검사 유발 정도’를 추가
- 동 시행령 조항을 근거로 금융위 고시인 분담금징수규정에서 추가감독분담금(=추가 분담요율)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

<금융회사별 감독분담금 분담요율 결정시 고려요소>

| 현행                 | 개정   |
|--------------------|--|
| ■ 금융회사별 총부채 및 영업수익 | ■ 금융회사별 총부채 및 영업수익<br>■ 재무건전성 악화·금융사고 등에 따른 추가적인 검사유발 정도 |

## 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## 라. 입법효과

- 금융회사별 실제 영업규모 및 분담금 납부능력에 부합하게 분담금 상한이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금융회사 간 납부형평성을 개선
- 금융사고 유발 금융회사 등에 대한 추가감독분담금을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유보원칙 위배 소지 제거

## 마.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

- 중복법안 없음

## 바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## ※ 참고 조문

### 「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」

제3조의2(감독분담금의 산정방법) ① 제3조의 구분에 의한 금융영역별 감독분담금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.

$$[0.6 \times \text{감독분담금 총액} \times (\frac{\text{해당영역 투입인력}}{\text{투입인력 합계}})] + [0.4 \times \text{감독분담금 총액} \times (\frac{\text{해당영역 영업수익}}{\text{영업수익 합계}})]$$

② 범시행령 제12조제1항에 의한 금융영역별 분담요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.

1. 별표1제1호의 금융영역 :  $\frac{\text{별표1제1호금융영역의감독분담금총액}}{\text{별표1제1호금융영역의총부채합계}}$

2. 별표1제2호의 금융영역 :

가. 총부채 기준 :  $0.6 \times \frac{\text{별표1제2호금융영역의감독분담금총액}}{\text{별표1제2호금융영역의총부채합계}}$

나. 영업수익 기준 :  $0.4 \times \frac{\text{별표1제2호금융영역의감독분담금총액}}{\text{별표1제2호금융영역의영업수익합계}}$

3. 별표1제3호의 금융영역 :

가. 총부채 기준 :  $0.7 \times \frac{\text{별표1제3호금융영역의감독분담금총액}}{\text{별표1제3호금융영역의총부채합계}}$

나. 보험료수입 기준 :  $0.3 \times \frac{\text{별표1제3호금융영역의감독분담금총액}}{\text{별표1제3호금융영역의보험료수입합계}}$

③ 검사대상기관별 감독분담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.

1. 별표1제1호의 기관 : 제2항제1호의 분담요율×해당검사대상기관의 총부채

2. 별표1제2호의 기관 : (제2항제2호가목의 분담요율×해당 검사대상기관의 총부채)+(제2항제2호나목의 분담요율×해당검사대상기관의 영업수익)

3. 별표1제3호의 기관 : (제2항제3호가목의 분담요율×해당 검사대상기관의 총부채)+(제2항제3호나목의 분담요율×해당검사대상기관의 보험료수입)

④ 원장은 직전사업연도 중 재무 건전성악화, 금융사고 등에 따른 추가적인 검사(부문검사에 한한다.) 실시로 검사대상기관의 금융영역별 투입 연인원수가 상위 0.1%(평균+표준편차\*3.09)에 속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해당 검사대상 기관별 분담금 총액에 30%를 추가하여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.

## 2. 감독·발행분담금 환급기준 개편 (안 제12조제4항 개정)

### 가. 개정 이유

- 금융감독원의 수입은 증권발행기관에 대하여 발행액 대비 정률로 부과하는 발행분담금(자본법 §442)과, 금감원 검사대상 금융기관에 대하여 차액보전 방식\*으로 부과하는 감독분담금으로 구성

\* 금감원 총 지출예산에서 발행분담금 등 여타 수입예산을 제외한 차액만큼 감독분담금을 징수(금융위설치법 시행령 §12③)

- 그런데 발행분담금 예산의 구조적 과소편성\* 때문에, 그 반대급부로 감독분담금이 실제 필요액보다 과다편성·징수\*\*되는 문제 발생

\* 발행분담금 수입은 자본시장 여건에 따른 불확실성이 높아 수입결손을 피하기 위해 수입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

→ 연도별 발행분담금 초과징수액 : ('16)4 ('17)207 ('18)234 ('19)314

\*\* 발행분담금 수입이 적게 편성된만큼 감독분담금 수입을 늘려서 예산 총당

### 나. 개정 내용

◇ 금감원 결산시 발생하는 수지차익의 환급방식을 개편하여 예산 편성시 과다책정된 감독분담금 부담액을 보정

- 금감원 결산시 발생하는 수지차익 중 ‘수입 초과액(수입결산-수입 예산)’은 감독분담금 납부기관에 전액 환급하도록 개편\*

\* 현재는 발행분담금 납부기관과 감독분담금 납부기관에 납부금액 비율대로 안분하여 환급

- 감독분담금 예산은 다른 수입을 제외한 차액만큼 편성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므로, 실제 발행분담금 수입액을 반영하여 예산편성시 과잉책정된 감독분담금 부담액을 감액경정

- ‘지출 불용액(수입예산-지출결산)’만 현행처럼 발행분담금 납부기관과 감독분담금 납부기관 간에 안분하여 환급

## 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## 라. 입법효과

- 발행분담금 예산의 구조적 과소편성으로 인한 감독분담금 납부 금융기관의 과도한 부담을 보정함으로써 분담금 납부기관 간의 형평성을 개선

## 마.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

- 해당 없음

## 바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## ※ 참고 조문

###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

제442조(분담금) ①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인(그 증권이 집합투자증권인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)은 금융감독원의 운영경비의 일부를 분담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분담요율·한도, 그 밖에 분담금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제388조(분담금의 분담요율·한도 등) ① 법 제442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분담요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로 한다. 이 경우 증권신고서 수리 후에 발행가액총액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변경된 발행가액총액을 기준으로 한다.

1.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가액총액의 1만분의 2
2. 제1호 외의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가액총액의 1천분의 1(일괄신고서

를 통하여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가액총액의 1만분의 4)

② 법 제442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한도 및 한도를 초과하여 징수한 분담금의 반환에 관하여는 「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분담금의 징수 방법 및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.

## 「금융기관 분담금 징수규정」

제5조(발행분담금의 요율)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행분담금의 분담요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. 이 경우 증권신고서(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신고서의 경우에는 일괄신고 추가서류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수리후에 발행가액총액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변경된 발행가액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.

1. 지분증권(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발행 : 발행가액총액의 1만분의 1.8

2. 채무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의 비율

가. 만기가 1년이하인 채무증권 : 발행가액총액의 1만분의 5

나. 만기가 1년초과 2년이하인 채무증권 : 발행가액총액의 1만분의 6

다. 만기가 2년을 초과하는 채무증권 : 발행가액총액의 1만분의 7

라.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괄신고서에 의하여 발행하는 채무증권 : 발행가액총액의 1만분의 4

마.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업자가 사업자금조달 목적이 아닌 금융투자상품 판매 목적으로 발행하는 「상법」 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(社債)로서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채무증권 : 발행가액총액의 1만분의 0.5

3. 파생결합증권의 발행 : 발행가액총액의 1만분의 0.5

4. 수익증권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의 경우 발행가액총액(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의 경우 별표3의 기준에 따른 회계기간 동안의 순발행금액)의 1만분의 0.5

5. 투자계약증권의 발행 : 발행가액총액의 1만분의 9

② (생략)